

수익원 제시해도 안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잘 될까

**의사·정부 계약형, 정주여건·충분한 수입 보장
지방엔 이미 파격 연봉에도 채용난 사례 다수
복지부, 조속히 추진한다지만...“유인책 부족”
전문가 “전문의 수련 과정, 지역과 연계해야”**

정부가 지방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열악한 의료취약지 근무환경과 정주여건 등 현실적인 유인책이나 보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인력의 자발적인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방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한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료전단계 충분한 수입과 정주여건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과의 장기 근무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필수의사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행처리를 한 지역필수의사제와 '강제성'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역의사제'는 10년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의대 입학생을 선발하며 장학금을 지원한다. 복지부가 도입하는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무나 강제성 없이 의사가 정부와 계약을 맺고 지역에 있는 필수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형식이다. 복지부는 법으로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지역의사제가 의사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인식해 그동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왔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달 31일 사전설명회에서 "근본적으로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기반한 계약형태로 지역에서 하는 업무하는 계획"이라면서 "가급적이면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내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필수의사제의 구체적인 계약 방식과 구조,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연봉에도 의료 인력을 채용하기 힘든 지역의료기관이 이미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인력의 자발적인 유입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취약지 전문의로 인력 양성을 목표로 도입된 공중보건장학생제도 지원율만 보더라도 50%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

한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학생들은 면허를 취득한 후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공중보건장학생제도 선발·운영 현황'에 따르면 사업 시행 이후 5년 간 모집 정원 100명 중 52명만 지원해 총원율은 52%에 불과했다. 또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부터 늘리더라도 증원된 인력이 10년이 지난 후에야 배출되는 만큼, 지역에서 당장 일할 인력을 유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전문의 제도 수련 과정을 지역과 연계시켜야 한다"면서 "지금 레지던트 과정에서 3-4년 차 이후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지소 등 시설을 보장한 후 6개월~1년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 국장은 "지역필수의사제는 팀서비스"라

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오지 않아서 문제인데, (지역필수의사제의 경우 의무 복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특별한 페널티나 강력한 제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있게 양성할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있는)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 인력을 책임지고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 밖에도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학 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의무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늘려 의료 인력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선욱기자



전통놀이에 첨단 디지털 기술 접목한 빛의 놀이터 절기상 입춘이차 포근한 날씨를 보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 마련된 빛의 놀이터를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빛의 놀이터는 사방치기, 땅따먹기, 달팽이 놀이, 방방이(트램펄린) LED 시소 등 익숙한 전통놀이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5월 6일까지 운영한다.

“귀성길 문제 없어요”...설 연휴 고속도로서 전기차 무료 충전

환경부, 전기·수소차 충전 특별 대책 추진

설 연휴 기간 일부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무료 충전 서비스를 시행해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무공해차 운전자들의 충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운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충전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된 전기차는 56만5154대, 충전시설은 30만5309기다. 수소차는 3만4405대, 충전시설 300기가 등록됐다. 설 연휴 하루 평균 고속도로 교통량은 520만대로 전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길 예상 소요 시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10분, 서울에서 광주까지 7시간, 서울에서 목포까지 8시간20분 등이다. 환경부는 설 연휴 전인 5일부터 8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한다. 또 109개 충전시설 주요 운영 사업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해 충전기 안전 및 고장 상태 점검, 고장에 대비한 주요 부품 확보, 신속한 정비 체계 제정,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 등을 요청한다. 아울러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 점

검 결과와 수소차 충전소 운영시간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지하고, 카카오톡(T), 티맵(T-map), 하이(hyung, 수소유통정보시스템) 등 민간사업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충전 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는지 점검한다. 설 연휴 중인 9일부터 12일까지는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전화 상담 창구 운영 인력을 기존 5인에서 12인으로 증원한다. 또한 현장점검 업체를 지역별로 지정해 충전기 고장, 사용 불편에 대응한다.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도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10곳은 광주(부산), 천안(호주), 옥산(부산), 예산(대전), 고창(서울), 군위(부산), 입장(거봉포도), 오창(남이), 충주(장원), 음성(하남) 등이다. 이곳에서는 전기차 1대당 약 100km를 운행할 수 있는 20kW의 전력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다. 휴게소별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 제공 일자 카카오톡(T), 티맵(T-map)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바른 충전 문화를 조성하고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운전 방법과 수소 충전



소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바른 전기차 운전 방법 및 충전 주의 사항은 ▲완전 충전 후 출발 ▲급할 때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 ▲귀성길에 오르기 전 충전소 위치 확인 ▲에코모드 활용, 급가속 지양, 회생제동 등으로 배터리 효율 늘리기 ▲기는 급강하 시 평상시보다 여유 있는 충전 주행거리 확보 ▲급속충전기 1시간 이상 접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는 8일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방면)를 방문해 수소 충전소와 전기차의 충전기 운영·관리 실태, 전기차 무료 이동 충전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번 충전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연휴 기간에 전기차와 수소차 사용자가 충전에 불편 없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면기자

32년 사역한 교회 재산 빼돌린 담임목사

지역 1년6개월 선고

교회 회의록을 조작해 32년간 사역한 교회 소유의 부동산과 재산을 빼돌린 목사. 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1989년경부터 2021년 10월23일경 징역 판결을 받을 때까지 32년 동안 서울 성북구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며 교회 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21년 9월29일경 자신이 살고 있던 교회 소유의 아파트 한 세대를 본인 명의로 바꾸기 위해 회의록을 조작해 서울북부지법 등 기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6월9일경 작성된 회의록 원문에는 '목사님 현재 사택을 담임목사 이름으로 등기 이전하기로 한다'고만 적혀 있었지만, A씨는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세부적인 정보를 임의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21년 10월13일경에는 3억원 상당이 있는 교회 예금 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고, 다음날에도 1억원, 같은 달 19일경에는 6800만원을 이체하는 등 총 2억 6800만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0여년 전 회의에서 교회가 보유한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뤄졌고,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아파트 소재지와 구조물 등에

관한 내용을 보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2억원가량을 이체한 행위는 퇴직금 중간 정산 차원이었다고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7일 사문서 번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각 행위를 권한 없이 저지른 범행으로 봤다. 교회 관계자들이 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당시 회의록을 작성한 교인이 '목사님 현재 사택을 담임목사 이름으로 등기이전하기로 하다' 부분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A씨 요청으로 기재했다고 법정 증언한 점에 주목했다. 교회 예금 편취 의혹에 관해서는 해당 교회가 은퇴 목사에게 일정 금액의 퇴직금과 위로금을 주긴 하지만, A씨가 2억원 상당을 빼돌렸을 당시에는 은퇴가 아닌 개인적인 비리로 정직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다고도 지적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교회가 2억3800만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소속 교인들 전체를 배신한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권기자

외교관 여권 발급 자녀 연령 낮춘다

과도한 특혜한 지적을 받은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24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4일 당국에 따르면 외교부는 오는 9일부터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법제처 심사를 끝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관보 게재만 남겨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관공·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는 미혼인 자녀의 연령을 현행 27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일반 국민들은 성년이 되면 스스로 비자를 받고 해외에 나가야 한다. 반면 외교관 자녀들은 그간 성년이 된 지 8년이 지나도록 외교관 여권을 발급 받아 외교관급 특혜를 받아왔다. 해외에서 죄를 지어도 현지 국가에서 처벌되지 않는 면책특권과 함께 사중 심사 면제, 광항 출입국 소지품 검사 제외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 가 있는 외교관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 함께 거주하는 자녀에게도 특혜를 주는 것인데, 성인이 된 자녀에게까지 발급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외교관의 자녀가 성년이 되면 이같은 특권을 박탈한다. 중국·러시아·프랑스·스페인·스위스 등은 원칙

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며 미국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만 23세 미만 자녀까지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 호주는 자녀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조차 하지 않는다. 외교부는 그동안 한국의 경우 자녀들이 군복무나 대학 교육 등을 마치는 27세는 돼야 경제 독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발급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낮추는 데 극구 반대해왔다. 법적 투표 가능 연령인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당초 안보다 후퇴한 만 24세 미만으로 결정된 것도 이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기존에 외교관 여권을 발급 받은 만 24~27세 미만은 반납하지 않고 계속 활용할 수 있다. 행정성 시비가 생길 여지가 남아 있다. 외교부는 현재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직원들의 자녀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공·외교관 여권의 발급 관리를 강화하려는 게 이번 개정의 취지”라면서 “외교관 여권 발급 현황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아 몇 명이 발급 받았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